

담배규제기본협약과 세계 각국의 담배가격



김 행 진
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

세 계보건기구(WHO)는 담배의 전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 1999년 5월부터 190여개국에 참여한 가운데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5월, WHO총회에서 최종 협약(안)을 통과시켰다.

WHO가 이처럼 담배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추진하게 된 것은, 흡연이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문제라는 점 때문이다. 즉 담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연간 420만명이 조기사망하고 있고 이 추세를 그대로 두면 2030년에는 연간 1천만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게 될 것이다. 또 약 7억의 어린이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13~15세의 전 세계 어린이 4명 중 1명이 10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담배의 폐해가 알려지면서 세계 최대의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의 경우 여러 나라에서 연간 4천 건의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흡연을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공중보건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경제적·환경적 피해의 예방과, 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정책으로 담배가격·세금조정, 흡연구역 조정, 담배포장 규격 및 명칭 제한, 경고문구 표시, 담배성분 규제 및 공개, 금연 및 흡연예방 홍보, 담배의존 관련상담·진단·치료 프로그램 기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담배공

급 감소를 위한 조치로서 담배광고 판촉 후원의 포괄적 금지, 담배 불법거래 방지,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협약에서는 흡연율, 특히 청소년 흡연율 감소의 주요정책으로 담배가격 및 세금의 조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몇년간 담배가격을 꾸준히 인상해 왔으나 전체 소비자물가 인상에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인상효과를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며,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최근에는 인상여부와 인상수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 할 때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OECD국가 중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1천원 정도의 인상으로 흡연율의 대폭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제도 어려운데 담배가격인상은 결국 소비자 물가를 인상시킬 것이며 저소득층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이다 등등의 반대도 적지 않지만, 주된 반대이유를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우려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백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이유도 모두가 똑같이 누려야 할 건강할 권리를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다.

한편 담배규제기본협약 체결을 전후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담배가격 인상을 비롯한 금연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독일은, 보건의료관련 제도개선과 자원조달, 국민건강증진, 그리고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담배가격을 3유로(4,200원)

에서 4유로(5,700원)로 인상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2006년까지 담배가격을 현재 3유로(4,200원)에서 2배로 인상할 계획인데, 2003년에 이미 담배가격을 15% 인상하여 담배소비를 8.6%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프랑스는 이외에도 흡연을 감소를 위한 정책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흡연은 당신을 죽인다'는 경고문구를 담뱃갑의 40%에 해당되는 크기로 넣도록 하였다. 프랑스의 청소년(13~24세) 흡연율은 53%로 유럽 최고수준인데, 향후 5년간 청소년 흡연율 30%와 성인흡연율 2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EU 15개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최소 부과기준(1,000개비당 60유로)을 법률로 정하는 등 금연을 위한 가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7.5달러(9,000원)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하루 한갑의 담배를 피우는 뉴욕 시민은 연간 2,700달러(320만원)를 연기로 날리게 된다. 뉴욕시가 담배가격을 인상한 결과 담배 판매량과 청소년 흡연율이 2001년에 비해 50%나 감소했다고 한다.

뉴욕은 세계 최대 담배제조회사인 필립모리스 본사가 있는 유서깊은(?) 흡연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2002년 취임이후 뉴욕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해 온 블룸버그 시장의 주장에 따라 지난 3월 30일부터 모든 공공시설은 물론 술집·식당·당구장 등 위락시설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되면 3회 적발되면 영업정지 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새 금연법을 발효시켰다.

담배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으로 인해 뉴욕의 담배 판매량과 청소년 흡연율이 2001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고, 9.11 테러 이후 경기침체로 재정위기를 겪고 이는 뉴욕시의 세수는 5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북한도 최근 담배가격을 최고 60배 가까이 인상하는 등 금연열풍이 일고 있다. 지난해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은 경제개혁에 착수하면서 당초 한갑당 1원 70전~2원하던 '선봉'이 50~60원에 팔리고 있다고 한다. 같은 기간에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10원에서 2천원선으로 17~20배정도 올랐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지난해부터 금연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이처럼 담배가격이 오르면 아예 금연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세계 각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담배가격인상이 흡연을 감소와 국민건강증진에 미칠 영향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 각국의 경험에 따르면 담배가격을 10% 인상할 때 선진국은 4%, 개발도상국은 8% 정도 담배소비가 감소한다. 국내에서도 담배가격을 10% 인상할 경우 가구당 담배수요는 7%, 보건의료수요는 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원년 등, 2002).

특히 주목할 것은 청소년의 흡연율이다. 저소득층, 청소년층, 여성은 성인 남성에 비해 가격인상에 더 민감한데, 특히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약 3배 가량 더 민감하다고 한다. 가격인상을 통한 담배의 경제적 장벽을 높이는 것은 청소년 흡연 중단은 말할 것도 없고 흡연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데 더욱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5년에서 2001년 사이에 미국 고교생 흡연율이 36%에서 25%로 감소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같은 기간동안 담배가격이 1.77달러에서 3.53달러로 인상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경우도 담배가격인상을 통해 47%에 달하던 15~17세 청소년 흡연율을 16%로 감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최근 청소년 흡연율을 2000년 37.9%에서 2007년 5%까지 감소시키고자 다각적인 정책추진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담배가격 인상논란이 지혜롭게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 [7]

“흡연예방, 금연실천”